

'자유'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유린 '민주주의'를 유린한 하는 파시스트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죄목으로 법에 파시스트 독재자 따라 엄격하고 냉정한 판결을 받게될 것을 고대합니다.
들이야말로
'자유 민주주의의' 그러한 현명한 판결이 재판정에 가득 울려 퍼질 때 우리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노동자 계급과 민중은 역사의 대로를 따라 어떠한 억압과 착취 할 것이다. 도 사라진 새 사회를 향하여 힘차게 진군하게 될 것입니다.

민족 통일 민주주의 노동자 동맹

(삼민 동맹)



혁명, 그 필연적 승리를 향하여

I 노동자의 깃발(김진국 : 병합 심리 요청서 중에서)

II 우리들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조자이며
실천자입니다(김태진 : 모두 진술)

민족 통일 민주주의 노동자 동맹

◇활동 개요◇

삼민 동맹의 출발은, 서노련 와해 이후 노동 운동의 역사를 실천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그를 위해서는 조직 건설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믿고 있던 작은 그룹들이었다. 이들은 한편으로 혁명 운동의 과학적인 이론 정립을 목표로 강령 작업을 수행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 흩어진 활동가간의 연결망 확보와 공장과의 연결을 시도하면서 토론과 투쟁의 조직화를 도모하였다. 지속적인 선전 작업과 조직화의 수단으로써 정치 신문인 “노동자의 깃발”을 발간·배포하면서 지역 단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토대와 체계를 세운 창립 대회를 1988년 10월에 열고 정식으로 사회주의적 노동 운동 정치 조직인 “민족 통일 민주주의 노동자 동맹”을 결성하였다.

강령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을 규합, 조직을 재정비한 삼민 동맹은 노동자당

건설을 당면의 조직적 목표로 제기하고 노동자당의 사상·조직적 기초를 위한 지속적인 강령 선전 작업과 제반 공장 활동의 지원 및 선진 노동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두 축으로 설정하고 1~28호에 이르는 “노동자의 깃발” 발행, 노동 단체 및 민중 단체와 결합한 여러 투쟁을 수행, 각 정치 조직들과의 공동 행동 모색 및 결합의 시도를 해왔다.

◇사건 개요◇

이들이 집이나 회사에서 영장 없이 연행된 것은 90년 4월 25일 단 하루만이었다. 책과 노트는 물론 개인 재산인 컴퓨터조차 증거를 이유로 강탈해 갔다. 잠도 재우지 않는 조사 속에서 이를 이 지난 27일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고 연행자 중 구자욱 씨는 불구속으로 입건되었다가 일 주일만에 다시 같은 죄목으

로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다. 현정권의 부도덕성과 잔인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5명의 1심이 거의 끝난 무렵 노랫없이 집에서 인사불성이신 어머님을 간호하던 김진태를 연행하여 전격 구속 시켰고 전국 노운협에서 활동하던 임해규 씨를 구속하였다. 특히 김진태 씨는 동생 김진국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어머니, 해소 기침

과 백내장으로 병고에 시달리는 아버지, 부모님 병 간호에 고생하는 아내와 어린 두 딸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집한 형편이 어려우니 조사만 하겠다며 데려가서 구속시킨 것은 김진태 씨 개인의 구속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자”的 살인 행위와 같다. 구속자 가족들은 이러한 행위를 공공연히 저질러 온, 저지르고 있는 보안사·안기부·치안본부의 해체를 요구하며 여러 형태의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사건 관련자 약력◇

- 구자욱(22)
불구속 입건되었다가 영장 재발부로 '90. 4. 구속. 1년 선고.
- 김소영(27)
89년 이후 구로 지역에서 노동 운동. 90년 이후 삼민 동맹 활동. 2년 선고. 항소 계류중
- 김용기(33)
85년 인천 후지카 해고 후 ‘인천 노동 운동 탄압 저지 투쟁 위원회’ 활동. 86년~87년 구로 가두 투쟁으로 1년 6월 선고, 출소. 88년 이후 삼민 동맹 활동. 2년 선고. 항소 계류중.
- 김인선(30)
85년~86년 인노련 활동. 88년 이후 삼민 동맹 활동. 2년 선고. 항소 계류중.
- 김중성(34)
85년 인천 이천전기 해고 이후 ‘인천 노동 운동 탄압 저지 투쟁 위원회’

활동. 86~87 5·3사태로 수배, 해제. 89년 이후 삼민 동맹 활동. 1년 6월 선고. 항소 계류중.

· 김진국(33)

85년 인천 한일스텐레스 해고. 86. 1.~86. 7. 인천 노동 운동 탄압 저지 투쟁 위원회 활동으로 수배, 해제. 88년 이후 삼민 동맹 활동. 3년 6월 선고. 항소 계류중.

· 김진태(34)

84년 인천 린나이코리아 해고. 86. 5~87. 6 서노련 사건으로 구속, 석방. 89. 9~90. 4 노동자 신문 편집부장으로 활동. 구형 4년. 1심 계류중.

· 김태진(33)

85년 이후 서울, 인천 지역에서 노동 운동. 88년 이후 삼민 동맹 활동. 3년 6월 선고. 항소 계류중.

· 박윤배(33)

'85년 대우중공업 해고. 85년 노동 운동 탄압 저지 투쟁 위원회 활동으

로 구속. 88년 이후 삼민 동맹 활동. 90년 10월 구속중 3회 전태일 문학상에 우수작으로 당선. 2년 6월 선고, 항소 계류중.

· 서재석(32)

86년 이후 구로 지역에서 노동 운동. 89년 이후 삼민 동맹 활동. 2년 선고. 항소 계류중.

· 신남희(33)

87년 한국 제지 해고. 87년 이후 안양, 서울 등지에서 노동 운동. 88년 이후 삼민 동맹 활동. 4년 선고, 항소 계류중.

· 신준수(30)

85. 4. 한일 스텐레스 해고. 85년 이후 인천 노동 운동 탄압 저지 투쟁 위원회 활동. 88년 이후 삼민 동맹 활동. 2년 선고. 항소 계류중.

· 이명학(24)

1년 선고. 항소 계류중.

· 이강석(30)

86년 이후 안양 지역에서 노동 운동. 88년 이후 삼민 동맹 활동. 2년 6월 선고. 항소 계류중.

· 임해규(30)

85년 이후 인노련 활동. 88년 이후 삼민 동맹 활동. 89년 6월 전민련·전노운협 정책실 활동. 90. 9월 구속. 1심 계류중(1월 18일 구형).

· 하승창(29)

85년 이후 인노련 활동. 88년 이후 삼민 동맹 활동. 2년 선고. 항소 계류중.

· 횡순현(31)

86년~87년 안양 동양 공업사 근무. 88년 이후 삼민 동맹 활동. 2년 선고. 항소 계류중.



I. 『노동자의 깃발』



1. 남한 노동 운동의 성장과 함께 한 사회주의 운동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아래 새롭게 시작된 노동자 대중 운동, 노동 조합을 중심으로 시대적 분위기와 결합하여 YH 사건처럼 때로는 정국을 돌파하기도 하고, 80년 서울의 봄과 뒤이은 민주 노조의 각개 격파처럼 때로는 시류에 떠밀리며 면면히 이어져온 남한의 노동자 대중 운동은 위의 '진보적 지식인 대이동'과 함께, 질적 전환을 이루게 된 1980년대 노동 운동을 떠받쳐 온 두 개의 큰 흐름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흐름을 하나의 노동 운동 대열로 융합시켜내는 것, 흔히 말하는 대로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의 결합'은 그러므로, 당사자들이 얼마나 사상적으로 무장되었건, 혹은 막강한 대중적 토대를 일구어 놓았건, 혹은 그 역사적 과제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나 있었건에, 80년대 노동 운동에 부과된 역사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 역시 그 같은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그 같은 운동의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이었을 따름입니다.

그 같은 운동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의 정치 사상적 경향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개인적 체험의 수준에서부터, 종교적 교의의 실현을 위한 구도적 활동, 노동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정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은
80년대 노동 운동에
부과된 역사적
과제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활동가들의 사상적 경향은 「공산당 선언」도 읽어보지 못한 초보적인 사회주의자 혹은 사회주의 초심자들이었습니다. 과 헌신, 스스로에 대한 훈련과 검열, 당 조직의 건설 또는 당 조직원을 포섭하기 위한 목적 등에 이르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주도적 경향은,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초보적인 사회주의자 혹은 사회주의 초심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자료가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료 소지 행위 자체만으로도 남영동 치안 본부 대공 분실에 끌려가 모진 고문 속에 사회주의자임을 승인하는 자인서와 전향하겠다는 반성문을 써야만 했으므로(소위 '야학 연합회' 사건으로 불린 이 대규모 공작에 걸려 들어 탄압받은 사람은 그 숫자가 밝혀진 바 없으나 몇 백 명 단위로 추정된다), 사회주의자라고는 하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집필한 「공산당 선언」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 운동은 초토화된 채 혹하여 얼음장 밑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노동 조합 운동의 현실 역시 매우 어려운 실태였습니다. 1980년 가을의 소위 '정화 조치'와 삼청 교육대에서의 모진 탄압과 뒤이은 민주 노조의 각개 격파로 70년대 민주 노조 운동을 주도해 오던 원풍 노조, 콘트롤데이터 노조, 반도 노조, 나아가 마침내 70년대 민주 노조 운동의 산증인이던 청계 괴복 노조마저 아프리 점거 농성과 투신의 격렬한 투쟁 끝에 해산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임금 동결이란 혹한이 몰아닥쳐 노동 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대중 운동은 초토화된 채 두터운 얼음장 밑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1984년과 1985년, 노동 현장에 취업해 들어간 진보적 지식인과, 술한 해고의 경력과 탄압의 악몽을 간직한 역전의 선진 노동자, 그리고 억압의 현실에 새롭게 눈뜨기 시작한 의식 있는 노동자들이 당면한 노동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중소 업체가 몰려있는 부천의 어느 회사의 경우, 공장에 붙어 있던 명색이 기숙사라는 방 하나가 비만 오면 물이 들어와 불룩한 방바닥 한 구석에 가방을 쌓아 놓고 밤새 물을 퍼내야 했으며, 또 다른 시공업의 경우, 군대나 감옥에서도 보기

힘든 꽁보리밥에 단무지(그나마도 큰 식탁에 두 그릇)만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87년 대파업 이전의 노동 현실은 그와 같은 상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인천 부평의 시공업은 심지어 연말 연시 연휴인데도 12월 30일 출근하여 1월 2일 정오에 퇴근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도 작업장 문을 걸어 잠근 채. 마치 18세기 영국의 노동자 또는 일제 치하 노동 현실처럼 들릴 지 모르지만 전두환 폭압 정권의 3년여에 걸친 노동자 탄압 정책 하에서 자본가들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동안 우리 동지들은 몇십 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 참담한 현실에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노동 현실은 대의뿐인 사회주의 초심자들을 굳은 신념의 사회주의자, 의지와 용기로 뭉친 투사로 단련시켜 주었습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투쟁이 개시된 것은 1984년이었습니다. 질식할 것 같은 강요된 침묵을 깨고, 대구 택시 기사들의 파업 및 차량 시위가 터져 나왔고 이는 곳곳의 택시 기사들의 투쟁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워낙 폭발력 있게 투쟁이 분출되었으므로, 전두환 정권은 요구의 일부를 들어줌으로써 노동자 투쟁의 확산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노조 결성이 허용되는 것을 보면서 승리를 확인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오히려 공장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하던 구로 지역 노동자들 가운데 신규 노조들이 결성되었고 잠들어 있던 노조 및 어용 노조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태의 진전에 당황한 전두환 정권은 급기야 노조 자체의 설립을 다시금 불허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노조 결성이 불허되었으나 한번 불붙기 시작한 노동자 투쟁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정치적 색조를 띠며 발전하였습니다. 해고자들의 민한당사 점거 농성은 억압의 동토에 따뜻한 바람을 몰고 왔으며, 낮은

또한 노동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18세기 영국의 노동 현실, 또는 일제 치하의 노동 현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 현실은 더욱 굳은 신념을 가진 투사로 단련시켜 주었습니다.



대구 택시 기사 파업, 투표율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겨울에 실시된 2·12 총선에 민주 구로 지역 노조 결성
화와 신당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투쟁, 민한당사
농성 투쟁, 총선
투쟁 등 1984년
이후의 상황은 이것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85년 2·12 총선에서 신당의 정치적 승리는, 새로운 투쟁의 조건을 창출하였으며 투쟁 주제들에게는 커다란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85년 말의 노동자 투쟁은 87년 여름의 대투쟁에 비할 수는 없겠으나, 전두환 폭정의 강요된 침묵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력이 얼마나 큰 규모로 잠재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그리하여 87년 대투쟁의 예고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만 해도 500인 이상 규모의 공장은 거의 예외 없이 투쟁이 개시되었으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태 발전의 이면에, 앞서 말한 바 운동의 두 가지 흐름이 내재되어 있음을 간파한 독재 정권은, 두 흐름을 분리하여 각각 격파하려 하였습니다.

노동 현장에 투신한 진보적 지식인들을, ‘목적을 달리하는 근로자’니 ‘위장 취업자’니 하고 이간질시켜 노동자들과 분리시키고는 마구잡이로 해고, 구속시켰으며, 새로 결성되었거나 민주화된 노동 조합들에 대해서는 자본가를 사주하여 온갖 평계거리를 끌어다 대면서 과피해 들어왔습니다. 인천에서는 대한 마이크로 노조, 한일 스텐레스 노조에 이어 6개월째 줄기 차게 노조 민주화 투쟁을 전개해 온 대우 자동차 노조 정상화 추진 위원회에 대한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맞선 400여 대우 노동자들의 13일간에 걸친 파업 농성은, 인천 지역을 넘어 전국 노동자들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로 지역의 선봉 민주 노조들에 대한 탄압이 개시되었으며, 일년여에 걸쳐 역량을 축적해 온 민주 노조들의 동맹 파업과 연대 시위가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구로 동맹 파업——그것은 87년 대투쟁 아래 발전해 온 오늘의 노동 운동에서 되돌아보면 그 규모에 있어 큰 주목을 끌지 못할런지도 모르겠으나, 투쟁이 갖는 정치적 의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 운동의 역사에



서 질적 전환의 계기였다는 점에서 불멸의 역사적 투쟁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우 자동차 파업 농성이 투쟁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구로 동맹 파업은 당시의 사회주의 초심자들과 선진 노동자들, 그리고 투쟁을 통해 이제 막 운동의 대열에 합류해 들어온 많은 노동자 투사들에게 확신을 갖게끔 해주었습니다. 파업 그 자체에서는 패배하였으나, 동맹 파업이 준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으며, 그때까지는 단위로서만 운동의 주체로 여겨지던 노동자들이, 노동 운동이, 실제로 운동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회 운동의 중심이 학생 운동으로부터 노동 운동으로 옮겨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동 운동에 대한 참여의 열정은 깊고도 넓게 확산되어, 교사, 대학원생, 일반 기업체 넷타이 사원에서도 현업을 정리하고 노동 현장으로 투신해 왔습니다. 재야 운동권의 진보적 인사들도 대거 노동 운동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두환 정권 당국의 온갖 악선전과 분열 책동에도 불구하고, 투쟁에 동참했거나 이웃 공장의 투쟁을 지켜 본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소위 ‘위장 취업자’로 매도된 활동가, 해고자들을 직접 또는 마음속으로 열렬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를 ‘위장 취업자’로 낙인찍힌 활동가들은, 그리하여 정권 당국에 의해 사회주의자로 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대열내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대열내에, 이제 막 한 대의로서의 사회주의로부터, 더 과학적 이론 학습에 뒷받침된 진짜 사회주의자, 과학적 사회주의자로 성장하기 위한 사상 이론 학습과 토론의 풍토가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동 운동은 사회주의의 이론적 자양분을 받아들이며 질적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국가 보안법과 온갖 폭력적 탄압 및 국민 대중의 뿌리깊은 반공 이데올로기

특히 구로
동맹 파업은
우리 노동 운동의
역사에서 질적
전환의 계기였다는
점에서 불멸의
역사적 투쟁이었습니다

사회 운동의
중심이
학생 운동으로부터
노동 운동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열정과 신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사회주의 초심자들은
과학적 이론 학습에
뒷받침되어
진짜 사회주의자로
질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평범하면서도, 확실한 용기를 지닌 사회주의자로 자연스럽게 성장해 왔습니다.

때문에, 비록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라는 애매한 그러나 가장 정확한 표현밖에는 내세울 수 없었으나, 운동의 역사적 전통과 이념적 대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당국의 매도 그리고 보급되기 시작한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서들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 운동과 결합한 사회주의자들이 현실 운동 속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본인들이 스스로에 대해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신념을 더욱 굳게 하였으며, 그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 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게 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전전한 상식으로 볼 때도 결코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을 뿐더러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본인들을 포함한 많은 활동가들이 유별나거나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 앞에 다소간 확실한 용기를 지녔고, 엄중한 억압의 현실 속에서 사회주의자로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2.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의 결합을 위하여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의 결합——그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주의에 관해 서술되어 있는 책이나 문건들을 노동자들이 읽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의 이념과 현실 세계의 운동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조직입니다. 하나의 이념을 바탕으로 제 개인의 의지와 행동을 통일시켜낼 수 있는 조직, 그 이념을 공공연하게 선전하는 부분과 노동자들 속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부분이 하나의 틀 안에 결합되어 있는 조직을 결성하고 그 속에 활동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구로 동맹 파업 이후, 그와 같은 논의와 노력은 과거에 비해서는 한 계단 높은 질적 발전을 이루며 계속되었고 그 토대 위에서 서울 노동 운동 연합과 인천 지역 노동자 연맹이 결성 가능합니다.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의 결합은 조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되었습니다. 서노련과 인노련은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 건설”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노동자 대중 가운데서의 공공연한 정치 활동을 목표로 하여 정기적으로 신문을 발행하였고, 임금 인상 투쟁 및 노조 민주화 투쟁에 개입하였으며 학생들과 연대하여 가두 시위를 전개하는 등 일시적으로나마 경인 지역의 노동 운동권을 대표하여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정치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였습니다. 본인들 역시 대부분 서노련·인노련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계를 맺고, 그와 같은 제반 활동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활동가들이 견지하고 있던 이념은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의 건설” 정도였으며, 이는 표현상의 제약 때문만이 아니라 당시의 대체적인 이론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회주의라는 관념은 운동의 방향을 가리켜주는 가치 개념 정도로 인식되었을 뿐, 현실의 노동 운동을 변화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적 지침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사회주의적 상상력을 발전시킨다’는 모토 아래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인 몇 가지 구호를 제시하는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던 활동가들의 수준은 이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조직 활동의 경험도 매우 일천하여, 지도부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미덕처럼 생각하였으며, 자신의 견해를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개진하지 않는 것을 겸손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같은 결정과 집행을 수행하는 조직 및 조직원의 범위, 즉 누가 조직원이고, 누구는 아닌지 조차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조직이 이중 삼중으로 중중화되고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초기에 가졌던 열정은 감소되고, 정체의 어려움으로 활동이 위축되면서 분열은 수습하기 어려운 정도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구로 동맹 파업 이후 이러한 결합을 위한 노력의 결과 서노련·인노련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활동가들의 수준의 면에서나 조직 활동의 경험 면에서 미숙하여 많은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서노련·인노련은 그와 같은 이념적 준비의 부족과 이론적 불철저함 그리고 이러한 역량 경쟁 부족 등 모든 주체적 한계와 역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노동 운동의 질적 발전과 새로운 단계로의 진전을 위한 역사적 과제는 냉엄한 것이었습니다. 운동 발전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역부족이라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지체될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완성된 이론 체계로서, 학생 운동을 중심으로 사회 운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던 북한 조선 노동당의 혁명 이론과 같은 내용의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론 및 주체 사상의 등장은 막중한 역사적 과업 앞에서 혼미를 거듭하던 서노련·인노련의 즉각적인 답변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이에 답변을 제출하지 못했던 서노련과 인노련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두환 정권 당국의 탄압과 내부적 갈등으로 마침내 스스로 해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의 결합을 통한 운동의 질적 발전이라는 엄중한 요구 앞에, 막연한 이념적 지향과 체계화되지 못한 이론, 불분명하게 애매한 성격의 조직 및 민주주의가 유보된 철저한 복종의 규율 등으로 응답하려 했던 서노련과 인노련의 해소는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노련과 인노련 중심으로 결집하였던 활동가들이 보여주었던 놀라운 혁신성과 투쟁성은 그 자체로서 노동 운동의 새로운 전투적 전통의 기틀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냉엄한 역사적 과제의 실현 및 그를 위한 노동자당의 건설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이고도 실천적인 과제로’ 부각시켜냈습니다. 누구도 이제 그와 같은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밝히도록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서노련과 인노련이 와해되고 난 후, 노동 운동권은 일정한 중심도 없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진보적

그러나 서노련과
인노련 활동가들의
혁신성과 투쟁성은
새로운 전투적
전통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인텔리 출신 현장 활동가들이 다시금 학교로 돌아가 복학하거나, 다른 직업을 택하거나 본래 직업으로 복귀하여 노동 운동의 대열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간의 활동에 대한 불유쾌한 기억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한아름 씩 안고 떠났을 것입니다. 돌아갈 곳도, 향해서 떠날 곳도 없는 많은 노동자 출신 해고자들 역시 자신을 묶어 주고 싸 안아줄 조직도 없이 소속도 없이 흩어져, 일부는 운동에 등을 돌리기도 하고 블랙리스트 때문에 조그마한 가내 공장 주변을 맴돌기도 하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폭압과 횡포는 극에 달하여, 신민당이 주도하던 일체의 반정부 집회가 원천 봉쇄되었고, 일 주일이 멀다 하고 노동 운동 조직을 파괴하여 이적 단체로 몰아붙이는 사건이 신문지상을 장식하였으며,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노동자들의 투쟁마저 깊은 겨울잠에 빠진 듯 가라앉았습니다. 오직 운동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고 있던 일부 인텔리 출신 활동가와 노동 운동을 계속하는 이외에 다른 아무 방도가 없고 그리하여 노동 운동의 실질적인 중추를 형성하게 될 선진 노동자들만이, 홀로 또는 조그만 그룹을 이룬 채 상황 타개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서노련·인노련의 이념적 불철저함과 대비되어 하나의 완성된 이론 체계로서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던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론을 주장하던 그룹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직 우리 운동은 전위 조직을 건설할 역량이 준비되지 못하였고, 여건이 성숙치 못했으므로, 모두 산개하여 대중 속에서 단련되고 겸증받는 것이 시급하다’는 요지의 “산개론”을 주장하여, 조직 활동에 대한 기피 현상을 더욱 만연시켰습니다. 모여 있어도 힘이 빠지는 판국에, 개개인과 작은 써클로 분산시켜 놓게 됨으로써 운동의 침체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단파 라디오를 통해 북한 방송을 듣거나 방송 내용을 채록한 유인물을 몰래 돌려 읽는 모습들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들 조직이 와해되고
정권의 폭압성이
날로 드세지면서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크게 물질러들었습니다



NLPDR 그룹의
이른바 “산개론”은
조직 활동 기피 현상을
더욱 만연시켰습니다.

그 어떠한 이론도
현실운동의
피와 땀 속에서만
생명력을
기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NLPDR론은
결코 남한 사회의
현실과 운동을
올바로 제시
하지 못합니다.

말투까지도 방송을 모방하였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로부터 분리된 ‘혁명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속에 도피해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운동의 바람직한 본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노동 운동의 역사를 보아도,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론 체계와 조직 수단을 빌려서 손쉽게 승리를 쟁취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무리 딱 들어맞는 것 같은 이론도, 그것이 지난한 현실 운동의 피와 땀 속에서 자신의 생명력을 획득해내지 못하는 한, 결코 현실 운동의 지침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 전쟁에 뒤이은 분단의 고착화와 침예한 정치·군사적 대치 상태, 남북 간의 전면적인 대결과 경쟁 체제는 우리 노동 운동이 이념과 조직이라는 가장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두 가지 무기를 오랫동안 가질 수 없게 만들어 왔습니다. 북한 정권 당국 역시 그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간의 대남 정책은 이 같은 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 대중의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해 왔을 뿐이라는 것, 그 이론(NLPDR론)은 결코 남한 사회의 현실과 운동의 방도를 옳게 설명하고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현실적 조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직 해체 사상”이나 다름없는 산개를 주장하는 것은 그간의 성과를 되돌리는 것에 다름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본인들은 그와 같은 경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그 당시부터 하나의 조직적인 대오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활동가들과 마찬가지로 본인들 역시 침체 상태에 빠진 채 분열과 이합 집산을 거쳤습니다. 그 가운데 노동 운동의 역사를 실천적으로 계승하는 가운데, 그 성과와 오류 모두로부터 배우며, 당장의 어려움을 둘파해내기 위해서라도 조직 건설이 시급하다고 믿었던 작은 그룹들이 바로 현재의 삼민 동맹의 출발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 같은 그룹 중 일부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부터

올바른 혁명 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확보해야한다는 목표 아래 이론 및 선전 작업을 도모하였고, 또 다른 그룹들은 사분 오열된 지역의 활동가들간에 연결망을 확보하고 공장과의 연결을 시도하면서 토론과 투쟁의 조직화를 도모하였으며, 그 같은 그룹들간의 상호 연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선전 작업을 위해, 또한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정치 신문 「노동자의 깃발」을 발간 배포해 왔습니다. 강령 초안에 해당하는 “우리의 현실과 계획”이란 소책자를 발간하고, 「노동자의 깃발」을 창간하여 지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정치 선전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위 강령 초안을 연재 해설하는 1년여 기간 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룹들을 부분적으로 공장에 연결망을 복구하거나 새롭게 만들어내고, 지역 단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와 체계를 나름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 같은 활동의 토대 위에서 본인들은 1988년 10월 창립 대회를 개최하고 정식으로 사회주의적 노동 운동 정치 조직인 “민족 통일 민주주의 노동자 동맹(약칭 삼민 동맹)”을 결성하였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창립 대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당시나 지금이나 향후로나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던 사실을 궁지로 여길 것입니다.

3. 혁명, 그 필연적 승리에 대한 과학적 규명

대회에서는 강령을 토의 확정하고 규약을 마련하였는 바, “우리의 현실과 계획” 제하로 발간된 삼민 동맹의 강령은 이 재판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다소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이하 강령 및 「노동자의 깃발」 기사 내용에 관한 진술은, 검출과 구치소측의 불법 부당한 재판 자료 열람 제한 조치로 인하여, 공소장에 제시된 부분적인 내용과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함으로써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



니다.)

1)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남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전세계적 발전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는 어떤 지위에 있으며 특수한 조건은 무엇인가

강령은 먼저 우리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는데, 우선, 현시대는 18세기 말 자본주의 등장과 제국주의로의 발전 및 식민지 침탈로써 세계 구석구석까지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바야흐로 세계사의 발전이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한 이래 어떤 발전 단계에 와 있는가? 20세기 초 러시아에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된 이후 세계는 어떤 발전 단계에 와 있는가? 그 속에서 각국은 어떤 상호 관계와 상대적 지위에 처해 있는가? 그 관계의 발전 단계는 어떠하며, 현재는 어떤 수준에 있는가 등, 한국 사회가 전세계적 발전 과정 속에서 어떤 구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수한 조건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을 기점으로 하여,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제국주의가 경쟁을 특징으로 하던 세계 역사의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는 바,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각국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형성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진영과, 제국주의 국가들 및 그 집단적 지배하에 재편된 신식민지 국가들의 진영 및 그 상호 대립의 체제로 변화 발전하였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미국을 정점으로 UN·IMF·GATT-NATO로 표현되는 정치, 경제, 군사상의 단일한 제국주의 세계 체제를 형성하는 한편 식민지 민중의 성장하는 민족 해방 운동 역량을 포섭·분쇄하면서 이를 재편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수립(독립)을 허용하는 가운데 집단적으로 정치—경제—군사의 제축면에서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신식민지 체제를 확립시켰습니다. 즉, 제국주의 일국이 배타적이고 전일적으로 특정 식민지를 지배·수탈하던 구제국주의—식민지 체제로부터, 독자적인 국민 국가를 수립토록 허용하고 이를 매개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신식민지 국가군을 집단적 전면적으

2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 진영에 대응하여 제국주의 세력은 식민지에 국민 국가를 수립해 하는 신식민지 전략으로 나아갔습니다.

로 지배하는 제국주의 세계 체제—신식민지 국가군의 관계로 변화하였습니다. 당연히 민중의 투쟁 역시,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로부터의 독립, 즉 자주 독립 국가의 수립을 위한 투쟁으로부터 이미 수립되어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 정책을 집행해주고 있는 독재 권력을 자주적이고 민중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그 성격과 내용이 변화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이와 같은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발전 경로와 단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발전 과정 속에서 진행된 분단과 전쟁 이후의 전면적인 남북간의 대치 상황은, 한국 사회가 신식민지 국가의 전형적이고도 극단적인 발전의 과정을 걷도록 하는 특수한 조건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전후 세계의 재편 과정에서 한반도의 남과 북은 각각 미국과 소련에 점령되었고, 미·소 양군정의 실시 아래 남한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 예속된 신식민지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하도록 요구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발발된 한국 전쟁은 미국과 소련간의 대립 및 미·소를 중심으로 한 양대 진영간의 첨예한 냉전적 대립을 세계적 범주에서 구축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고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키면서 첨예한 적대적 대치 상태를 조성하였으며, 한국 사회를 미국의 지배하에 더욱 강력하게 결박시키면서 남과 북에 체제 경쟁을 심화시켜, 각각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서로 다른 발전 과정을 폭력적으로 강제할 조건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제의 침략 위협”이란 항상적 위기감의 조성 속에서 강고한 김일성 체제를 구축해 나아갔으며, 남한에서는 “붉은 공산 집단의 남침 위협”이란 허구적 위기감을 일상화시키는 가운데 군사 독재 정권과 독점 재벌의 전민중에 대한 전면적 수탈·동원 체제를 형성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한국 전쟁은 한국 사회에 반공 이데올로기와 반공 군사력에 기초한 강력한 반공 군사 독재 정권의 탄생을 필연적인 것으로



한국 사회 또한 같은 길을 밟았습니다.
더구나 분단과 전쟁은 한국 사회를 전형적인 신식민지 국가로 형성했습니다.

남한에서는 남침 위협이라는 허구적 위기감을 일상화시키면서 독재 정권과 독점 재벌의 수탈, 동원 체제를 형성시켜 왔습니다.

차관과 원조 형식의 제국주의 자본에 기초한 '경제 개발 계획'은 신식민지 고착화 과정이었다.

만들었습니다. 어영부영 말뿐인 반공으로는 한국 사회의 신식민지적 발전을 강요할 수 없었으며, 그것이 바로 이승만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몰락 및 5·16 쿠데타와 뒤이은 군사 독재 정권 수립의 배경이자 조건인 것입니다. 5·16 쿠데타를 통해 등장한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은 한국 사회를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신식민지로 결박시키는 과정에서, 원조와 차관 형식으로 위장 침투한 제국주의 자본에 기초하여 출혈 수출 위주의 자본주의적 공업화를 '경제 개발 계획'의 이름 아래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을 파탄시켜 저렴한 노동자를 공급하는 한편 공업 제품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농업을 예속시키는 '새마을 운동'을 진행시켰으며, 70년대초 세계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외자를 끌어들이면서 중화학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신식민지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는 강력한 국가 권력의 주도하에 전민중의 희생의 바탕 위에 독점 자본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 스스로를 신식민지로 강력히 결박시키는,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였습니다.

2)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계급 및 상호 관계는 어떻게 변화 발전하였나?

한국 사회가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권력 주변에는 군사 독재 정권과 결탁된 소수의 독점 재벌이 모여들어 지배 계급을 형성한 반면에, 그 반대편에는 자본주의적 공업 생산이 사회적 생산의 중추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도시와 공장 지대 주변에 밀집된 거대한 노동자 계급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본간의 경쟁에서 미국과 연줄이 닿아 있거나 군사 독재 정권과 인연이 있는 자본이 나머지 자본가들을 도태시키면서 재벌로 성장하여 한국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급성장한 것과 맞물려서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 진행됨에 따라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강화되고 규모와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노동자 계급이 당시 커다란 잠재적 폭발력을 간직한 채, 한국 사회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힘을 축적할 수 있는 주도 계급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편, 자본주의적 농지 개혁으로 말미암아 영세 소농 생산 체제하에 놓여 있던 농업 생산은, 독점 자본의 자기 발전 요구로서 수출 위주 공업화의 희생양이 될 것을 강요받게 됨에 따라 주로는 정책적 강제 수단에 의해 때로는 원천적으로 불공정한 가운데 소위 '경쟁의 논리'에 따라 농업 생산 자체가 파탄을 거듭하였습니다. 국민 경제에서 농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격하게 감소되었으며, 이농 촉진 정책에 따라, 독점 재벌을 살찌우기 위한 저렴한 노동력을 대거 공급하면서, 농민은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최하층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농촌으로부터는 쫓겨났으나 도시와 공장 지대에서 새로운 근대적 노동 계급으로 변신하지 못한 많은 빈민층이 생업의 불안정과 주거의 불안정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예비군으로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 광범하게 퇴적하게 되었습니다.

독점 재벌이 성장하는 동안, 정권의 부당한 간섭과 수탈 및 독점 자본의 횡포 속에서 몰락과 부침을 거듭하던 중소 자본은 점차 독자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독점 재벌에 하청 계열화되었으며, 독점 재벌과 자신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쥐어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로서의 한국 사회는, 통화와 금융의 장악 및 기간 산업의 장악 등을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여건을 통제하고 있는 총체적 자본가로서의 국가 권력 및 그와 결탁하에서 주요 산업 및 대공장을 장악하고 있는 독점 재벌 등 소수 지배 계급이, 사회의 나머지

자본주의적 농지 개혁으로 틸농, 이농이 촉진되어 독점 자본을 위한 값싼 노동력이 대량 공급되었으며 농민은 한국 사회의 최하층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독점 자본의 횡포 속에서 몰락과 부침을 거듭하던 중소 자본은 독점 재벌의 하청 계열화했다.

요컨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농민·빈민 등의 제계급을 착취·수탈하고 있는 사회, 따라서 그 직접적 착취 관계하에 놓여 있는 노동자 계급을 선두로 하여 간접적으로 그들에 의해 수탈당하는 제계급 계층 민중이 그들 소수 지배 계급에 대해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사회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소수 지배 계급과
그들의 착취를 받는
노동자 계급을
선두로 한
민중이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소수 독점 계급이
경제 성장의
모든 과실을
독차지한 채
낭비와 향락에
빠져 있는 동안,
부의 생산자인
노동자 계급은
재해, 질병, 실업,
물가에 시달려
파멸해 갔습니다.

3) 그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가?

공장이 대규모화하고 분업이 발전하며, 공장간 및 산업간의 연관과 의존도가 높아지고 대공장을 중심으로 중소 공장이 계열화되는 등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한 공장 또는 주요 산업에서의 파업이나 생산 차질이 국민 경제 전체에 타격을 가져올 뿐더러 정치권 전체를 긴장시키고 사회 전반을 뒤흔들 만큼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생산 활동 및 노동의 사회적 책임 또한 막중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생산 수단인 대공장과 기간 산업 및 사회 간접 자본과 통화 제도 등이 국가와 독점 재벌에 의해 독점적으로 소유됨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독점 재벌의 사적 이윤 추구에 의해 오히려 생산이 통제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같은 사회적 노동, 사회적 생산의 결과인 부도,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公正하게 분배되지 않고, 소수 정권 담당자와 독점 재벌의 검은 손아귀에 몽땅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소수 지배 계급이 경제 성장의 모든 과실을 독차지한 채 사치와 낭비, 사회적 자원의 훼손, 과소비와 향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사회적 생산의 담당자요 경제 성장의 실질적 주체였던 노동자 계급과 농민 등 민중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 재해와 직업병의 위협, 실업의 고통, 생계의 불안정, 물가 불안과 치솟는 전세값, 늘어만 가는 빚더미 등에 짓눌린 채, 성장의 모든 성과로부터 소외당하고 빈곤을 만연·재생산시키는 가운데 스스로를 조금씩 파멸시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독점 재벌의 사적인 이윤 추구와 탐욕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균형 있고도 계획성 있는 생산을 통한 사회적 생산력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은 현저히 가로막히게 되었으며, 국가적 재산과 자연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부가 소수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사회의 한쪽 구석에서는 사치와 향락, 부도덕과 온갖 범죄가 양성되어 사회 전반에 만연되는 동안, 나머지 대다수의 민중은 가난과 질병, 비교육과 문화적 소외로 인하여 인간의 발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생존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탕주의와 투기의 만연은 사회적 노동의 가치 자체를 훼손시켜 전반적으로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력이 발전하고 사회적 생산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수 지배 계급의 민중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증대함에 비추어 자신의 사적 이윤 때문에 그 사회적 책임을 최소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지배 계급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사회의 나머지 계급 전체를 점점 더 지배하게 됨에 따라 점점 더 자신에 적대적이게 만들으로써, 그와 같이 모순에 찬 사회 체계를 끝장낼 수 있는 힘과 조건 또한 성숙시켜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산력 향상과
사회적 생산의 확대는
소수 지배 계급의
민중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했으나
동시에
다른 계급을
자기 자신에 더욱
적대적이게 만들으로써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4) 그러한 제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제모순 및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가지 문제들은 주요 생산 수단에 대한 소수의 독점적 소유를 그냥 놔 둔 채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나 금융 실명제가 후퇴한 것은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투기조차도 이미 정책의 수단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판명났습니다. 회생 불능의 농업 파탄 해결, 노동자의 생활에 대한 근본적 안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간 산업의 독점적 소유를 폐지하고 민주주의적 통제를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보장 등은 구조와 체제 자체의 대수술, 즉 주요 산업과 대기업에 대한 독점적 소유를 폐지하는 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생산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산업과 대기업에 대한 독점적 소유를 폐지하고 생산 및 노동 과정에 대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책임과 민주주의적 통제를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주요 생산 부문에서는 생산의 사회화에 조응하여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확립하고, 이를 추동력으로 여타 부문의 생산자와 생산 수단을 결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수요의 측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생산력 발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의 확대, 생산물의 공정한 분배, 사회의 총체적 생산력 발전을 위한 생산자간의 자유롭고도 민주적인 연합 및 그에 기초한 계획 생산과 공정 분배——이러한 조치들만이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가 발전시켜온 제반 사회적 생산의 토대에 기초하여 사회 전반의 조화로운 발전을 담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가치의 원리들이야말로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나 소유 문제에 대한 대수술을 통한 사회의 혁명적 변혁을 현재의 소수 지배 계급이 받아들일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현체제의 직접적 피착취이자 이를 토대에서부터 무너뜨리며 나아가 새로운 사회적 생산의 제관계를 창출해낼 수 있는 계급인 노동자와, 그 같은 변화를 통해서만 독점 재벌의 지배 수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농민, 빈민 등 제민중이 소수 정권 담당

그려려면 소수 지배 계급과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적대적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한 싸움은 지금까지도 계속돼 왔지만 지금도 진행중이며, 투쟁의 유일한 결말인 독점 재벌의 해체와 민중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필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 그 같은 사회 변혁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이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념으로 무장하고,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사회 변혁의 방도에 대한 이론적 준비를 갖추며, 스스로를 조직으로 결집시키는 가운데, 크고 작은 일상적 요구들을 제기하여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와 사회 변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며, 일체의 저항을 폭압적으로 분쇄함으로써 현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 즉 노동자와 전민중에 대한 소수 군부 권력과 독점 재벌의 전면적 수탈 체제를 지탱해 온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군사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국내 자본을 동원하여 독점 재벌의 출현을 도모하고, 온갖 제도적·법적 및 정책적 특혜로써 독점 재벌이 급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온갖 이데올로기적·법적·제도적 및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며 이렇게 육성된 지배 계급에 대한 노동자와 민중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분쇄해 줌으로써, 독점 자본 성장의 최대의 호조건을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와 민중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자, 소수 지배자에게는 지상 천국인 현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시켜 자유롭고도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 체제, 즉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현체제의 창설자요 수호자인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권력을 수립해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6) 군사 독재 정권의 민중 탄압 근거는 무엇인가?

군사 독재 정권이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노동자와 민중을 탄압할 수 있었던 근거는, 분단과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절대적 지원하에 진행된 남북간의 전면적 대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 독재 정권은 모든 형태의 반정부적 저항에 대하여, “북한의 남침 위협” 운운하며 헌법을 초월하는 막강한 힘으로 이를 분쇄해 왔으며, 노동 운동에 투신한 활동가



민중에게는
지옥이요
소수 지배자에게는
지상 천국인
현체제를 변화시켜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체제의 수호자인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민중 권력을
수립해야 합니다.

역대 독재 정권은
“북의 남침 위협”
운운하며
노동 운동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제조하였고,
노동 조합마저도
이적 단체로
몰아부쳐왔습니다.

독재 정권은
끊임없이
저질 반공 이데올로기로
유포시킴과 동시에
100만 명에 이르는
물리력으로
민중의 투쟁을
압살하려 해 왔다.

독재정권의
존립 근거는
바로
분단 체제에 있다. 것입니다. 또한 민주화와 통일은 하나의 운동 과정일 수밖에

들을 소리 소문도 없이 끌어다 모진 고문 끝에 ‘붉은 간첩’으로 제조하였고, 반정부적 언사에 대해서는 용공의 딱지를 붙이는 등, 무제한적인 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매도하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북의 오판으로 인한 남침이 예상된다며 일체의 파업권을 부정해 왔으며, 심지어는 노동 조합마저도 이적 단체로 몰아부쳐 왔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은 남북간의 전면적 대치라는 조건에 기초하여 스스로가 내세운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마저도 유린해 왔으며,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역으로 끊임없이 분단과 대결과 경쟁을 심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분단과 남북 대결이야말로 군사 독재 정권의 존립 근거였기 때문에, 남한의 역대 독재 정권이 아무리 그럴 듯한 말로 치장한다 하더라도 결코 통일의 길에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민주적 ·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유보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로서의 국가 보안법, 군사적 대치와 긴장 상태를 근거로 100만에 이르는 군대와 경찰을 유지함으로써 이 물리력을 정권 유지의 강압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 끊임없이 전쟁의 비극을 상기시키고, 원시적이고도 야만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며, 남침 위협을 내세워 항상적인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민중의 투쟁 의지를 위축시키는 것——이 모든 민중 탄압의 수단과 방법들을 살펴볼 때,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 근거, 아니 군사 독재 정권 자체의 존립 근거는 바로 분단과 대결 체제에 있음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민주적 권리是为了 위한 모든 투쟁은 반드시 분단의 제거로까지 발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럴 때만 즉 분단을 해소하고 민족의 평화적 재통일을 완수할 때만 민중의 모든 민주적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화와 통일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유입니다.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 그러면 당면한 혁명의 성격과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현실의 제반 고통과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요 산업과 대기업 등에 대한 소수의 독점적 소유에 기초하여 노동자와 전체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구조화하고 있는 현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를 타파하고 그들의 손아귀로부터 주요한 사회적 생산 수단을 몰수, 사회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생산하고 노동하는 자들의 민주적이고도 평화적이며 자유로운 연합과 이에 기초한 계획 생산과 사회 전반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사회 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바, 이 같은 변혁의 주도 계급인 노동자 계급은, 우선적으로 농민, 빈민 등 제민중과 연대하고 중소 생산자의 민주적 부분과 제휴하여, 사회 변혁을 가로막고 있는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분단과 대치 상황을 해소하여 민족 통일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민중 권력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 과정은 일반적인 혁명의 경로와 마찬가지로 군사 독재 정권의 타도 후에 임시적인 혁명 정부를 수립하고, 새로이 민중 대표자 회의(의회격에 해당하는)를 선출 구성하여 여기서 새 헌법을 마련한 후, 새 헌법에 기초하고 민중의 의사에 의해 정식으로 새로운 민중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 타파와
사회적 생산 수단을
사회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연합과
그에 기초한
계획 생산,
이것이
우리 혁명의
내용이다.

군사 독재 정권 타도
→임시 혁명 정부 수립
→민중 대표자
회의 구성
→새 헌법 마련
→민중 정부 출범

따라서 당면 혁명의 성격을 민족 통일 민주주의 민중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삼민 동맹의 강령은, 비록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적 판단력과 합리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식화해 놓은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강령 속에 북한

“민중 해방을 위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방안”
북한 사회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회와는 다르다.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은 비현실적이며 잘못된 방침이다.

통일 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은 남과 북 전체 민중의 것이다.

통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자주, 민주, 평화의 원칙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 및 북한 정권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독자적인 통일 방안, 즉 “민중 해방을 위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방안”을 덧붙이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북한 사회는 우리의 노동자와 민중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와는 거리가 있으며 북한 정권에 대한 북한 민중의 정치적 참여가 바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분단과 한국 전쟁의 한 당사자로서 북한 정권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 그간의 통일 정책과 대남 전략 및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은 비현실적일 뿐더러 잘못된 방침이라는 것, 그로 인해 남한 민중과의 실질적 연대가 어려우며 북한 정권 당국의 제반 정책이나 조치가 남한의 민중 운동에 큰 도움을 별로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 통일 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은 남과 북 전체 민중의 것이며 절대 유보 또는 위임될 수 없다는 것, 남과 북 정권 당국은 개방과 교류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며 반민주적 반통일적 악법과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며, 군비를 축소하여 실질적인 통일의 조건을 마련키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즉각 정치 군사 회담을 개최할 것, 통일에 이르는 모든 교류와 회담은 당사자주의(자주), 공개와 참여 보장(민주), 대결이 아닌 협상(평화)의 원칙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 내적 조치로 모든 대결 체제의 유물을 철폐해야 하는 바, 전투 경찰, 예비군, 민방위 등의 폐지와 국가 보안법 철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족의 분단 현실에 대해 악의적 이데올로기에 물들지 않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남한 민중 운동의 독자성에 기초하여 한반도 전체의 발전을 염원하는 가운데 정리되어 있는 것임을 흔쾌히 인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일 북한 정권이 진실로 북한 민중의 참여와 요구에 기초하고 남한 민중의 요구와도 합치한다면, 민족 통일과 남한에서의 민중 혁명의 과정은 일치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남한의 노동자

와 민중은 독자적으로 혁명을 수행하여 민중 권력을 수립한 후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민족의 평화적 재통일을 추진하게 될 것인바, 후자의 경우라면 몇 배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남한 민중 운동에 지워진 역사적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통일의 선후 문제는 혁명 과정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본인들이 정치 조직 “민족 통일 민주주의 노동자 동맹”(삼민 동맹)을 결성하여 확정한 위와 같은 내용의 강령은 결코 장미빛 환상이거나 억지 논리가 아니라, 역사적 필연성에 기초하고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론이라는 사실은 이제 명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백만 민중이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내는 역사적 대변혁으로 서의 혁명을 단지 소수의 음모와 그들의 선동에 의해 일어나는 일시적인 소란 정도로밖에는 인식할 줄 모르는 우매한 자들, 변화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에 익숙한 수사관과 공안 검사 등 이데올로기 환자들만이, 본인들에 대하여 ‘혁명을 선동했다’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선동을 통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은 없습니다. 민중 혁명은 그 사회 경제적 토대의 변화와 제계급의 상태의 변화로부터 필연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며, 본인들을 비롯한 사회주의자 또는 조직들은 다만 그 혁명을 승리로 귀결시키기 위해, 그것도 최소의 희생으로 가장 빠르게 승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들을 해 나갈 뿐입니다. 당연히 본인들의 강령은 이런저런 음모나 반란을 꾸며 국민 여러분에게 화끈한 선물을 안겨드리겠다는 식의 헛된 약속이 아니라, 다가오는 혁명은 어떤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과제와 투쟁이 필요한가를 우리 자신의 의지와는 떨어진 객관적 현실로부터 정식화해낸 것입니다. 강령에 대한 그와 같은 이해야말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 권력 찬탈을 음모해 온 박정희, 전두환, 하나회, 월계수회 정식화한 것입니다.

우리 삼민 동맹의 강령은 역사적 필연성에 기초하고 과학적인 현실 분석의 결과이다.



우리의 강령은
다가오는 혁명의
성격과 과제,
그리고
투쟁의 내용을
정식화한 것입니다.

민중의 승리는
독재 정권의 물리력과 정치력을 약화시키고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극대화함으로써
얻어집니다.

등 반역 도당과 그 하수인들이 이해하는 정치·정치 조직·강령과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그야말로 이성과 과학에 기초한 과학적 사회주의자의 기본 태도인 것입니다.

8) 독재 타도와 민중 권력의 수립은 어떻게 가능한가?

본인들이 확정한 강령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당면한 우리 혁명의 성격이 위와 같다고 할 때, 그 혁명에서 민중의 승리, 즉 군사 독재 정권 타도와 민중 권리 수립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중의 승리는 다음 두 가지에 의해서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국가 보안법의 철폐와 민주적 제권리의 쟁취를 통해 민중을 정치적으로 진출시키면서 독재 정권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약화시키는 것, 군비 축소를 통해 물리력을 실질적으로 감축시키는 것, 다시 말해 오직 민족의 분단과 민중에 대한 억압을 위해서만 필요한 제반의 수단들(법적·제도적·물리적 장치들)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고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면서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북한 당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우리 민중 운동의 진출과 군사 독재 정권의 약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도적 군축과 대결 체제의 외해를 통해 군사 정권의 물리력과 정치력을 약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대결 체제의 유지와 상호 경쟁의 강화를 통해 군사 독재 정권의 탄압 근거를 유지시켜 줄 것인가의 선택은, 남한 민중 운동과 북한 당국간의 관계를 결정해주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렇게 약화된 군사 독재 정권이 스스로 권력을 내 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또 우리 현대사에서 스스로 물러난 권력자는 하나도 없다) 축소된 군대의 정치적 이용을 바치는 데 최선을 기울이면서도, 군사 독재 정권이 최후까지 저항을 포기하지 않을 때는,



희생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방지하며 승리를 단기간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마지막 저항을 직접 분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미리미리 총기를 집안 구석에 숨겨 놓도록 하는 것으로 가능합니까? 총 쏘는 법을 가르치면 가능합니까? 우리는 몇 자루의 총으로 군사 정권을 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망상은 군바리식 사고에 찌든 정치 군부나 폭력배들이 송상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민중이 그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결연히 승리를 향해 진군할 수 있도록 의식화·조직화시키는 것에 의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저항이 결연한 민중의 대오 앞에 무력해지도록 만드는 것, 민중이 그런 정도로까지 결연한 각오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충분히 깨닫도록 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화염병과 소총의 차이는 훨씬 작은 것입니다.

9) 민중의 조직화를 위해 어떤 활동이 요구되는가?

그러면 다가올 혁명의 시기에, 민중이 최후의 결전에서 주저 없이 투쟁하여 승리를 쟁취해내게 하기 위해서, 즉 그러한 결연한 의지로 무장한 대오를 형성케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요구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주력 부대인 노동자 계급에 대한 지난한 의식화·조직화 작업입니다. 화염병을 만들고 혹은 혼란기에 무기를 조달하는 일은 여기에 비하면 훨씬 간단한 일에 불과합니다. 한 번의 전투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가해져오는 온갖 탄압 속에서도, 그 크고 작은 탄압에 맞서 싸우도록 하면서 투쟁의 승리와 패배로부터 배우게 하고 단련 되게 하는 것, 운동의 궁극적 목표와 당면한 혁명의 과제 및 그 방법을 숙지하고 명심토록 하는 것, 노동 조합에서 당에

민중이 승리하려면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독재 정권의
마지막 저항을
직접 분쇄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몇 자루의 총이나
대포가 아니라
결사 투쟁할 수
있도록 의식화·
조직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르기까지 노동자 계급의 불균등한 발전에 비추어 다양한 수준과 위계로써 스스로를 조직화하도록 고무하는 것, 여타 계급을 정치적으로 지도하여 함께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혁명적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긴 기간 동안 부단히다가오는 어려움을 뚫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준비해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같은 활동을 통해 노동자 계급과 민중을 준비시키는 일 없이 혁명의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현대사, 오욕과 비극으로 점철된 민중 항쟁의 역사 속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적 진리의 냉엄함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독재 정권은 무너졌으되 민중은 결코 권력의 주인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4·19가 그러하고 저 항쟁의 80년 5월이 그러하였습니다. 그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를 두 눈 뜯 채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일단 대격전이 벌어지고 난 후 승리하지 못한 쪽에게 돌아오는 피의 보복과 대가가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의 강령은 바로 이 점에 대한 준비 없는 단순한 반정부 투쟁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동참하여 앞장서면서도, 스스로와 엄격히 구별하려고 합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다시 한번 말하거나 과학적 사회주의자는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반역 도당이 아니며, 요행수로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도박꾼도 아니며, 준비도 없이 반란을 선동하는 폭동주의자도 아니며, 아무에게나 적대성을 드러내며 파괴를 일삼는 파괴 분자가 아닙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건설자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얻어낸 과학적 결론에 따라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정열적으로 선전하며, 다가오는 혁명의 필연성과 객관적인 혁명의 성격을 제시하고, 그 혁명에서의 승리를 위해 기나긴 기간에 노동자와 민중을 어떻게 준비 시켜야 하는가를 밝히고, 최고의 혁신성과 끈기와 열정을 가지

고 노동자 계급 속에서 그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위한 지난한 작업을 마다 않고 기쁜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본인들 역시 그러한 태도로써 진지한 토론과 실천 활동을 거치면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서서히 결집해 나갔으며, 그와 같은 내용을 자신의 정치적 강령으로 확정하고 그에 따른 과업을 자신의 임무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며, 본 삼민 동맹의 창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4. 「노동자의 깃발」 발간, 배포 및 토의 활동

강령과 규약을 확정하고 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노동 운동 정치 조직 삼민 동맹을 결성한 본인들은,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노동자들 속에서의 의식화·조직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여러 활동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어 왔으며, 그리하여 본 재판에서도 가장 주요한 활동으로 기소되어 있는 바, 정치 조직 삼민 동맹의 기관지인 「노동자의 깃발」의 발간과 배포 및 토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인들은 87년 11월부터 90년 4월에 이르기까지 정치 신문이자 삼민 동맹의 기관지인 「노동자의 깃발」을 월간지 형태로 28호까지 발행해왔으며, 제29호는 제작 완료 단계에서 본인들이 구속됨으로 인하여 배포치 못하였습니다. 「노동자의 깃발」은 삼민 동맹이 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까지는, 당시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자당의 건설을 호소하는 정치 신문이었으며, 본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연결시켜 줌으로써 삼민 동맹의 결성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회 이후 「노동자의 깃발」은 삼민 동맹 기관지로서 우리 운동이 부딪히고 있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입장

“노동자의 깃발”은
사회주의와
노동자당 건설을
호소하는
정치 신문이다.



을 조직 내외와 운동권 전체에 대해 제기해 왔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주 간격을 유지하며 가장 지속적·정기적으로 발행되었으며, 토론의 조직자로 활동 단위의 연결자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깃발」은 발행 간격이 긴 이유로 하여 투쟁에 신속히 대응치 못하였으며, 공공연히 많은 노동자들과 접촉하지 못함으로써 구체성을 띠지 못하였고, 비합법 출판이라는 제약 조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권 당국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 제작 비용을 조달하는 일로부터 인쇄·제작·배포에 이르는 전과정은 실로 곳곳에 놓인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일 없이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당연히 본인들을 포함한 조직 전체의 결의와 의지의 담보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소위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주장 및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노동자의 깃발」을 비롯한 제반 문건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자의 깃발」이 그간 다루어온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 분야의 글들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오늘날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움직임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기본 명제와 현실의 제문제를 다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하는 분야이고, 또 하나는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이며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분야이며,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노력이 기울여진 노동자 운동과 현실 정치 투쟁에 관한 방침과 주장 등에 관한 분야가 그 세번째입니다.

먼저 ‘사회주의 및 개혁 운동과 관련된 글들’은 초기인 87년말~88년초부터 다루고 있는데, 사실 그 무렵에는 개혁 운동이 사회주의 제국에 확산되기 훨씬 이전이었으며,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구호가 처음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노동자의 깃발」은 그러한 개혁 운동을 처음부터 지지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습이 제국주의국 및 제3세계 민중에게 결코 ‘희망의 나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점 때문에 기존 사회주의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본인들이 스탈린주의 비판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운동권 및 소장 이론가들로부터, ‘스탈린적 편향을 제기하는 것은 옳으나 스탈린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트로츠키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받곤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스탈린주의 비판”이 많은 암묵적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같은 분위기는 결코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일 년여 전인 89년 6월 중국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운동권 전체에서 오직 「노동자의 깃발」만이 이를 ‘북경 인민 학살’로 규정하고 민주화 시위를 지지함으로써 나머지 운동권 전체 및 이론가들과 함께 하게 대치했던 일은 잘 알려져 있는 셈입니다. 인노련 발행의 「노동자의 길」 노동 계급 그룹의 『노동 계급』, R·S 명의의 팜플렛, 「노동 해방 문학」 및 기타 잡지에 기고된 이론가들의 글 등이 모두 「노동자의 깃발」이 견지한 태도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이 그치게 된 것은 물론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차우셰스쿠의 종말’이라는 충격이 지나고 난 후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화석화된 사회주의 원리도 거부하였으며 절대화된 교리처럼 맹신되는 이론도 비판하였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시한 방책들을 시대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암송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어떠한 형태의 사회주의의 전형 또는 모범이라는 개념도 갖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자본주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듯이 ‘순수한 사회주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유산을 토대로 새로운 사회로서 재조직하는 것이지, 어떤 나라를 본뜨거나 합쳐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주의를 그 어떤 유토피아나 지상 천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혁명과 위대한 지도자께서 인도해 줄 약속의 땅처럼 생각치 비판하였습니다.

순수한 자본주의가 존재할 수 없듯이, 순수한 사회주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많은 모순이 존재하며, 그 해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만 한다고 믿었으며, 그 같은 변화를 거부하고 인민 대중의 열망을 억누른다면, 민중의 힘에 의해 끌어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정 부패와 범죄적 행위는 결코 사회주의와 혁명이란 이름으로 은폐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넓은 관념과 넓은 체제가 부정된 지금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사회를 재조직할 것인가입니다. 브레즈네프가 장악했던 절대 권력을 고르바초프가 장악하면 가능합니까? 당시의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전시키면 됩니까? 지도자의 직책 나름이겠습니까? 아니면 지도자 하기 나름입니까? 관료가 장악하고 있던 공장을 새롭게 권력을 등지고 급조된 자본가의 손에 넘기면 됩니까? 공장 지배인이란 칭호 대신 공장 경영자라고 칭호만 바꿔주면 됩니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민중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게 하라,
그리하여 생산자간의 자유로운 연합을 실현케 하라,
이것이 레스트로이카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다음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관한 글들>은, 본 재판의 핵심이랄 수 있는 국가 보안법 제7조의 소위 '이적성' 여부를 가리는 주요 내용들이자, 본 삼민 동맹의 정치 노선상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운동

권에서는, 그간 40여 년 간의 반공 이데올로기 영향 탓으로 나름대로 객관적 분석에 근거한 독자적이고도 주체적인 통일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왔습니다. 북한 정권 당국이 제안한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을 놓고, 이를 찬성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나름대로 변형시켜 적용할 것인가, 비판할 것인가는 식의 수동적이고도 상대적인 태도밖에 나타내지 못해왔으며, 그나마도 분명하게 또 자신 있게 주장되지 못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삼민 동맹의 강령 및 통일 방안은, 북한 정권 당국의 대남 전략과 고려 연방제 통일안 등에 대하여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대립하는 독자적인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평양 축전·군축 등 매시기 매사단에서 서로 다른 독자적 주장으로 대비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창간 초기부터, 북한 정권 당국의 통일 정책을 비판하면서 남한 민중 운동의 독자성에 기초하고 현 군사 독재에 대항해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서의 통일 방안을 선전해 왔으며, 그에 따른 요구들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미 강령에서 군사 독재 정권이 통일에 나설 수 없는가를 분석하였으며, 북한 정권 당국의 정책 역시 왜 비현실적이며 잘못된 것인가, 그렇다면 올바른 대안은 무엇인가를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포괄적인 통일 방안뿐 아니라, 매시기 남북 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일관된 방침을 견지하며 구체화시켜 온 것입니다.

88올림픽에 대해서, 현 정권 당국이 올림픽을 체제 경쟁과 민중 운동 탄압의 계기로 이용하려는 데 반대함과 동시에, 공동 개최를 주장하는 북한 정권 당국에 대해 '공동 개최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분산 개최로라도) 오히려 적극 참여함으로써 남북간 대립과 긴장을 실질적으로 와해시키는 데 기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공동 개최 아니면 분단 고착화'라는 주장은 억지 논리임을 비판하였습니다.

우리 삼민 동맹의 강령과 통일 방안은 북한의 통일 정책에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독자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우리의 통일 방안은 남한 민중 운동의 독자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88 서울 올림픽 때 분산 개최로라도 오히려 적극 참여했어야 합니다.



결성 대회를 치를 무렵인 88년 10월경에 이미 노태우의 UN연설을 계기로, ‘교차 승인과 유엔 동시 가입의 긍정적 검토’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교차 승인이나 유엔 동시 가입이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분단 상황을 타개하고 민족의 평화적 재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교차 승인과 유엔 동시 가입을 올바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북한 정권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가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최근의 한·소수교와 변화된 정세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이 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두고 볼 때, 실로 금석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비 축소와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 철수의 문제는
남북한의
상호 군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부르조아 야당들은 ‘군 작전권 이양’을 주장하고, 북한 정권 당국은 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군 철수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외치기만 하면 됩니까?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미군의 부분 철수를 볼 때, 미군이 스스로 철수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남북간의 상호 군축입니다. 사실 88년만 해도 군사 정권 치하에서 만연된 ‘성역으로서의 군대’란 의식 때문에, 군축 요구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군사 정권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군축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우리의 요구와 투쟁은 매우 미약했는데도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강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미군 철수, 팀스피리트 반대’ 등의 요구가 매우 타당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장해 나서야겠지만, 북한 정권 당국이 ‘남한 민중을 대신해서’ 대변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변해 주면서 결국은 ‘일방적인 요구’로 끌어내려 공허한 구조로 만들기보다는, ‘상호 군축과 미군 철수, 상호 군사 훈련 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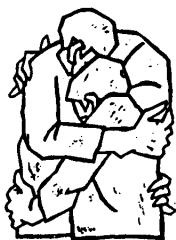
의 요구로 당국간 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풍이 아니라 햇볕’이라는 격언대로, 선도적인 군축 조처로서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남한 민중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군축과 정권 퇴진을 요구해 나설 수 있게 하여 민족의 평화적 재통일 기반을 조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본인들이 견지하고 천명해 온 정치적 입장은, 특히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서, 그 원칙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이르기까지 북한 정권 당국의 입장과 전면적으로 대비됩니다. 대비될 뿐 아니라 때로 상호 대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만 북한 정권 당국의 입장은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서 남한 민중 운동의 입장에 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성적 판단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군사 독재 정권의 입에 발린 선언이나 북한 당국의 일방적 주장보다 훨씬 합리적인 것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들의 무죄는 국가 보안법 자체의 부당성에 의해 원천적으로 증명되고 있지만, 현행 국가 보안법상으로 볼 때도 본인들을 제7조 ‘이적 행위’로 기소한 치안 본부와 검찰 관계자들의 사고 능력이 비정상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이 문자 해독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주장을 아예 읽어보지도 않은 채 본인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려는 음모에 골몰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본인들의 활동이 북한 정권 당국을 이롭게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아예 그럴 의도조차 가지고 있지 않음이 곳곳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활동을 축소하여 빠져나가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차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조직의 독자적 존재 이유인 동시에, 군사 독재 정권이 독자적인 남한 민중 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 선전하는 것을 폭로하여 그 독자성을 수호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우리는
통일 문제에서
북한 당국의
입장을 비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서
남한 민중 운동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이적 행위’로
기소한 치안 본부와
검찰 관계자들의
사고 능력이
비정상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운동과 현실 정치 투쟁에 관한 글들>은, 본인들이 가장 많은 주의와 노력과 공을 들인 부분들입니다. 수사 당국과 검찰측은 소위 ‘공안 문제 연구소’란 데서 빨간 밑줄을 그어준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분야의 글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주의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따라서 문제삼지도 않았지만, 본인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노동자의 깃발」을 줄기차게 발행해 온 것은 바로 이 같은 실천적인 문제들을 통해 현실 운동과 결합해 들어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노동자의 깃발」이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대부분 이런 범주의 글들을 통해서였을 것이며, 본인들 또한 그러기를 바라왔습니다. 본인들이 결성한 삼민 동맹과 그 기관지 「노동자의 깃발」이 단순한 의견 그룹과 그 표현물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은 그와 같은 현실 운동에 직접 가담하고, 우리의 견해를 제출할 뿐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그 단계와 질을 달리한 노동자 운동이 마침내 전노협으로 결집하기까지, 단위 노동 조합에서 지역 노조, 지역 노조 협의회, 공동 투쟁 본부, 전노협 등 다양한 수준 노조 조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발표해 왔으며, 임금 인상 투쟁에서 노동법 개정 투쟁, 파업 농성에서 가두 시위와 시가전에 이르는 노동자 대중 투쟁의 모든 측면과 투쟁 전술에 대해, 때로는 투쟁 소식의 형태로, 때로는 해설의 형태로, 때로는 주장의 형태로 우리의 견해를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노동 운동을 조합에만 묶어두는 데 반대하여, 정치 투쟁으로의 발전을 강조하였으며, 투쟁을 통해 배출된 선진 노동자들을 향해 줄기차게 노동자 당의 건설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것은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진출과 그 승리 및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담보해내고자 하는 사회주의자의 기본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노동 운동을 조합에만 묶어두는 데 반대하여 정치 투쟁으로의 발전과 노동자당 건설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본인들은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전체 민중의 투쟁 전선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만 민주화 운동에 한 부대로 참가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선두에 나서 그 투쟁의 방향을 올바로 견지하게 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요구에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 같은 과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토의를 바탕으로, 89년 1월 출범한 전민련의 투쟁 방향을 둘러싸고 당시 “B안”으로 명명되었던 투쟁 방침을 제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중 대회 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운동 전체에서 실제로 차지한 역할은 보잘것 없겠지만, 그러한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이 민중 운동의 선도자로 성장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본인들은 ‘노동자를 대신하여 그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과학적 사회주의자와 선진 노동자의 결합을 통한 ‘노동자 자신의’ 정당을 주장해왔으므로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시도 유보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깃발」 발간 및 배포를 중심으로 한 본인들의 활동은, 본인들이 강령에서 밝히고 있는 과제의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을 의식화·조직화하기 위한 작업들로서, 조직의 결정에 따른 기본적인 활동들입니다. 그 같은 활동을 개인별로 쪼개 놓을 경우 아무런 정치적 의의나 목적을 밝혀낼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본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조직 자체의 소위 ‘이적성’ 여부이기 때문에 조직의 목적과 성격을 밝혀내는 것이 다른 모든 활동에 대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서도 선두에 나서 투쟁의 방향을 올바로 견지하게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당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이 아니라 ‘노동자 자신의’ 정당이어야 합니다.

5. 삼민 동맹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삼민 동맹을 포함하여 인노련, 노동 계급 등의 노동 운동 조직들은 스스로의 조직적 성격에 대해 ‘정치 조직’ 혹은 ‘노동자 정치 조직’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는 그 정치적 목적인 강령을 검토하는 것이 일차적인 요구가 됩니다. 삼민 동맹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다가올 민족 통일 민주주의 민중 혁명에서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승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을

당면 혁명의
승리와
민중 권리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의
결합이 요청됩니다.
그 조직적 표현이
노동자당 건설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을 갖는 삼민 동맹이 반국가 단체입니까? 기소된 바와 같은 ‘이적 단체’입니까? 아니면 반정부 단체입니까? 비합법 단체입니까? 불순 비밀 지하 조직입니까? 조직의 정확한 위상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더욱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보안법 제2조는 소위 ‘반국가 단체’에 대하여, ①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② 위 목적으로 공산 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반국가’란 무엇입니까? 근대 사회이래도 그 같은 개념은 부적절합니다. 과거 이완용 등 을사 5적과 같이 ‘나라를 팔아먹은’ 경우 외에 오늘날에 이러한 개념은 부적절한

개념입니다. 거기에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음해하기 위한 음모가 담겨 있습니다. 개념을 차치하고, 법에 규정된 바대로만 보더라도 그 점은 명백합니다. 정부를 참칭한다면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다는 것인데, 그런 상태는 혁명의 시기 이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시기에는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변란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성은 현재의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컨대 어떤 학생이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하여, 그를 변란을 목적으로 했다거나 수괴의 지위에 오르려고 예비 음모하였다고 말할 수 없듯이, 직접적으로 새 정부를 참칭하는 사회주의적 혁명 조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사회주의자, 아니 상식적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혁명 권력 또는 대체 권력을 미리 만들어 두려는 무모한 발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같은 무모하고도 범죄적인 발상을 권력 찬탈을 노린 것은 역대 군사 독재 정권들이었으며, 오히려 그들에게나 반국가 단체라는 딱지가 어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재 정권은 반국가 단체라는 규정을 통하여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을 ‘모반자’, ‘반역 도당’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 같은 왜곡에 맞서 자신의 견해를 당당히 밝힘으로써 그 음모를 파탄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본인들 역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음모, 그것도 40여 년 간을 줄기차게 지탱해 온 음모는 바로 북한 정권=반국가 단체라는 규정입니다. 그 부당성은 이제는 너무나 명백하게 폭로되어 굳이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노태우 정권 스스로가 그 같은 규정의 허구성을 스스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반국가 단체라는 개념은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그 개념은 권력과 당(정치 조직)을 혼동시켜 결국은 노동자당의 출현을 원천 봉쇄하려는 수작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반국가 단체라는
개념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정치 조직과
정당 활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히 말하거나와 사회주의 혁명을 강령으로 내건다 하더라도 정당은 정당으로 규정되고 그 활동이 보장되어야지 반국가 단체 따위의 전근대적 규정으로 금압되어서는 안됩니다. 혁명적 시기에 현 독재 정권이 얼마나 엄청난 탈법·불법 행위를 저지를지 명약 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그 점을 문제삼지 않듯이, 그리고 대통령 되겠다는 꼬마가 육사에 입학하였다 해도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참칭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고 이를 처벌할 수 없듯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정치 조직과 노동자당은 현재의 정치 활동에 따라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삼민 동맹은 기소 내용처럼 소위 ‘이적 단체’입니까? 삼민 동맹은 결코 ‘이적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북한 정권=반국가 단체’라는 케케묵은 등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본인들의 주장과 활동 내용이 북한 정권 당국을 이롭게 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활동이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동조하여 이롭게 했다는 식의 기소 내용을 보면서는 다시 한번 검찰 당국의 사고 능력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같은 기소 내용은, 검찰측이 자료를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직무 유기 내지는 업무상 배임의 죄를 범하였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한글 해독 능력이 떨어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 본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정치적 보복뿐입니다. 삼민 동맹은 누구를 이롭게 하려고 했으며 또 누구를 이롭게 했습니까? 물론 우리 노동자 계급 및 민중입니다. 노동자와 민중이 현정권의 적입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적 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현정권이 노동자와 민중을 적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적 단체’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민중을 적으로 몰아

삼민 동맹은
반정부 조직입니다.
삼민 동맹은 결코
이적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이롭게 했는가?
물론
우리 노동자 계급과
민중입니다.

부치는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고 힘차게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을 이롭게 하고 현 독재 정권에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그 점을 조금도 감추고자 하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정권 당국과 민중이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광경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즉 노동자와 민중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독재 정권에 얼마나 해를 가했는지는, 부끄럽게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한 수사관은 본인들에 대하여 ‘그런데 왜 불법 비밀 지하 조직을 만들고 비합법 활동을 했느냐’고 헐문하였습니다. 우리는 비밀 지하 조직이 아닙니다. 마치 언론에는 천 길 땅속 깊이 숨겨졌던 엄청난 금덩이라도 캐낸듯이 치안 본부가 불법(… …) 사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웃지 못할 사기극인지를 쉽게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 뿐 아니라, 인민노련, 인노회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며 공공연히 활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소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활동인 기관지 발간 등을 마치 무슨 큰 일이나 캐낸듯이 난리를 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할 수만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그 많은 땀을 흘려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사무실을 공개적으로 운영하며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활동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같은 터무니 없는 재판으로 본인들을 구속하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무죄를 확인해 준다면, 본인들이 그렇게도 탈피하고자 했던 고달프고도 수공업적인 비합법 활동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합법성과 비합법성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여 해산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죄수회니 하는 비밀 지하 범죄 단체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노동자와 민중을
이롭게 하고
현 독재 정권에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 보안법상으로도 우리는 무죄이며, 국가 보안법 자체의 폐기가 본인들의 정치적 무죄를 증명합니다.



오. 비록 지금은 그 목숨이 다해가는 국가 보안법 등에 의해 불법으로 몰리고 있으나, 본인 등을 비롯한 노동 운동 정치 조직들은 노동자와 민중 속에서 점차 승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합법성이 민중에 의해 담보될 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와 본인들이 결성하여 활동해 온 노동자 정치 조직 삼민 동맹은, 남한의 노동자와 민중의 혁명, 민족의 평화적 재통일,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와 본인들이 결성하여 활동해 온 노동자 정치 조직 삼민 동맹은, 남한의 노동자와 민중의 혁명, 민족의 평화적 재통일,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리하여 노동자들을 과학적 사회주의를 무장시키고 노동자당을 중심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해 왔지만 결코 이적 단체가 아닙니다. 숨이 다해가는 현행 국가 보안법상으로도 본인들은 무죄이며, 숨이 넘어가는 국가 보안법 자체의 폐기가 이미 본인들의 정치적 무죄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II. 우리들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조자이며 실천자입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인 등 13명은 민족 통일 민주주의 노동자 동맹의 조직과 활동을 이유로 국가 보안법 제7조 1항, 3항, 5항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본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재판 거부를 통해 밝혔듯이, 이제는 휴지쪽에 불과한 국가 보안법으로 우리를 비롯한 수백 명을 철창 속에 가둬 놓고 민족 통일과 민주주의를 운위하는 현정권과 검찰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를 ‘정치범·양심수’의 단계도 거치지 않고 ‘대북한 정치 인질’로 삼은 데 대해서는 그 파렴치함에 치밀리는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길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패배감 속에 사그라드는 불꽃으로서가 아니라 전체 민중의 분노와 투쟁과 어우러져 민족 통일과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여는 찬란한 승리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는 환희 속에 우리는 이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80년대 이후 스스로 떨쳐 일어나 해방과 통일의 주역으로 성장한 노동자와 민중이 우리를 희망으로

우리의 분노는
새시대를 여는
찬란한 승리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는
환희 속에서
우리는
이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돈위준 것이며, 지금 부패의 냄새를 풍기며 파멸의 길로 들어 섰음을 스스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현정권과 자본가 계급이 우리를 밀어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 계급과 민중이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현실에 가슴 아파합니다. 탐욕의 배를 채우기에 여념이 없는 자본가 계급과 현 군사 독재 정권을 증오합니다. 노동자와 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억압의 죽채를 깨뜨리고 자유와 민주와 평등의 새로운 연합——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신념들이 십여 년 전 우리를 노동 운동, 혁명 운동으로 이끌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념과 노선을 주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의 4개월은 우리의 이념과 노선, 신념과 행위에 덧붙여 평가와 확인의 기회까지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현정권과 검찰의 의도와는 달리 이 재판을 통해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의 진실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정당성까지도 아울러 제기될 것입니다. 한 평 남짓 독방 속에 우리를 가둔다 해도, 내외를 갈라내는 창살들이 밧줄로 변해 우리의 손과 발, 머리까지 휘감는다 해도 우리가 노동자와 민중의 편, 즉 역사 발전에서 승리자의 편에 서 있음은 불변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재판부에 제출한 병합 심리 요청서를 통해 이번 재판의 의의와 민족 통일 민주주의 노동자 동맹의 조직과 활동 내용과 그 정당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모두 진술을 통해서는 이번 재판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 입장과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해야 할 쟁점들, 우리의 요구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독방 속에 가둔다 해도
쇠창살이
밧줄로 변해
우리의 손발,
머리를 휘감는다 해도
우리는
변함없이
노동자와 민중의 편,
승리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진전만이 본인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질 검사의 공소장 낭독을 통해 우리 삼민동맹과 그 조직원인 우리들은 완전히 분해되고, ‘폭력 혁명 음모’, ‘비밀 지하 조직’, ‘파괴 분자’ 등의 단어들만이 날개로 본 법정을 떠다니게 될 것이 자명한 바, 먼저 삼민 동맹은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의 혁명과 조직 활동에 대한 열정은 한국 사회의 현실 그 자체로부터 나옵니다.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 결박되고, 남북 분단과 정치 군사적 대치 상황에 기초해서만 자신의 지배를 유지할 수 있는 군사 독재 정권과 독점 재벌이 자본가의 천국, 대한 민국을 구가할 때, 억압과 착취의 고통 속에서 노동자 계급과 민중은 분노를 쌓아갔습니다.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일체의 저항은 독점 재벌과 결탁한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법과 제도, 이데올로기, 물리적 방면의 사용 가능한 모든 폭압 수단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이들 지배 계급은 자신의 발 밑에 스스로의 적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 재해와 직업병의 위험, 해고·실업의 위기, 비인간적인 멸시·천대 속에서도 묵묵히 스스로를 조직화해 온 노동자 계급이 바로 그 존재입니다. 끝없는 착취의 보따리를 채우기 위해 농업을 파탄시키고, 도시 주변에 직장 없고 집 없는 반실업 대중을 퇴적시키고, 중소 상인마저 갈취하고 나섬으로써 지배 계급은 이제 민중의 바다 속에 포위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요구와 투쟁은 이제 단순히 빼앗겼던 자그마한 뜻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야금야금 젊어먹힌 모두를 한꺼번에 되찾는 데 떨쳐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본가 계급과 독재 정권을 거꾸러 뜨리고 통일된 새 조국에 성큼 다가설 뿐만 아니라, 억압과

갖은 폭압을 행사하는
지배 계급은
자신의 발 밑에
스스로의 적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자 계급입니다.



우리는 착취 없는 평등의 새 사회를 이룩하리란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몇몇 사람의 숨겨진 소망에 지나지 않던 이러한 생각은 지금 수천, 수만의 사람들 가슴속에 잡고 있으며, 투쟁으로 드러나 과학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을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고자 민족 통일 민주주의 노동자 동맹을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인류 사회 발전의 보편적 과학인 유물 변증법, 계급 투쟁의 과학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의 사회주의 사회로의 발전이라는 굳은 믿음 위에 이를 앞장서 실천하기 위해 삼민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조직원의 조직적 결의에 기초하여 현사회 속에서의 계급 투쟁의 본질, 사회주의 사회 도래의 필연성, 이의 실현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임무 등을 정력적으로 선전했으며, 노동자 계급을, 민중 전체를 지도할 하나의 계급으로 조직화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의 당면 요구와 투쟁의 계획을 제기하고 노동자 속에서 이를 앞장서 실천했습니다. 현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각 계급 계층 민중의 자유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투쟁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민중 해방과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혁명 투쟁의 전과정을 지도할 혁명적 노동자당의 건설을 당면의 조직적 목표로 제기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분투했습니다.

따라서 삼민 동맹의 조직원으로서 우리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신봉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빛나는 사회주의의 미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조자이며 실천자입니다. 현실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생산과 사회의 주인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위대성을 굳게 믿고 이러한 신념을 노동자 계급 속에 전파하고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 운동가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육신이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편에 있음으로 해서 불의와 편견, 거짓과 탐욕, 음모와 배신에 맞서 싸울 힘을 갖게 된 혁명 운동가입니다.

삼민 동맹 조직원으로서

우리는 빛나는 사회주의의 미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조자이며 실천자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포로된 몸으로 재판에 임하게 되었지만 재판의 전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앞서 일한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괴고임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재판의 전과정 및, 지금으로서도 명약관화한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알량한 국가 보안법에 째맞추기 위해 우리의 주장, 우리의 활동을 갈갈이 찢어놓은 공소장에서의 우리의 범죄 행위를 변호하는 데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주장과 활동은 이미 수세기에 걸친 세계 민중 투쟁의 경험 속에서 입증되고 확인된 혁명의 과학을 통해 얻어진 한국 사회 발전과 새로운 사회 건설의 신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정치적 신조에 따른 행위는 언제나 그렇듯이 민중 스스로의 선택과 역사의 진전에 의해서만 심판될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 왕권에 대한 민중의 도전은 민중 대다수의 동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민중과는 다른 계급임을 선언하고 있던 왕과 그 일족에 의해 처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간교한 지배자들은 “대다수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대다수 민중의 동의에 기초한 국법 질서에 의거하여”라는 말로 자신들에 대한 반란 행위를 민중 전체에 도발로 은폐·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지배자들의 이러한 거만 행위는 그럴 듯하게 대다수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동자 계급과 민중이 국가의 주인, 역사의 주인임을 선언한 지금, 민중 해방의 선진 투사들에게 덧씌워지는 ‘민중의 적’이라는 심판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한국 사회 계급간의

정치적 신조에 따른 행위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민중 스스로의 선택과 역사의 진전에 의해서만 심판될 수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일부 부대가 지배 계급에게 일시적으로 포로가 되었다는 객관적 현실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재판은 역사의 법정에서 민중이 심판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피고로 하여, 더 좁게는 국가 보안법을 비롯한 민중 탄압의 무기들을 피고로 하여, 역사의 법정에서 민중이 심판자로 등장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본인등이 중언하는 자리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번 재판의 전과정을 통해 사회주의자로서의 우리의 신념과 활동, 사회주의자 조직으로서의 삼민 동맹의 조직과 활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주장하여 옹호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발전, 노동자 계급과 성장, 또 그들의 슬픔과 분노 속에 사회주의는 현시대 양심과 지성의 유일한 선택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교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주의 우상과 관료주의의 씩은 물과도 싸워야 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공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파멸의 함정쯤으로 생각하는 지배자들의 왜곡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선각자들의 머리속과 책갈피에서 해방시켜 노동 계급에게로 가져가야 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파괴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주의가, 인류 진보의 발목을 잡는 시대 착오적 사상과 인간들만 파괴할 뿐, 건전한 사고와 지성의 소유자인 민중에게는 오직 창조의 표상일 뿐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한국 사회와 한국 민중의 유일하고도 필연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셋째로, 분명히 해둘 것은 우리들에 대한 구속·기소·재판에 이르는 전과정은 정치적·집단적 보복과 도발이 분명한바,

우리는 이에 대해 정치적·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줄곧 주장해 오던 한국 사회 계급 대립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가해졌고 민중 해방의 투사들에게 예외 없이 가해지는 합법의 탈을 쓴 억압 조치들에 대해 그 계급적 성격을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법률조차 내던져 버린 모습들, 건전한 계급 의식의 소유자에게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불법 연행과 구금, 고문과 협박, 검찰측의 구타 행위, 불법 압수, 변호사와의 교통권 방해, 재판 관련 자료의 차입 및 열독 제한 등)에 대해 폭로하고, 법적으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대항해 싸울 것입니다.

또 이미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한 바 있듯이 분리 심리 기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병합 심리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심리가 진행된다 하여도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 즉 삼민 동맹의 조직적 실체 파악에 목적을 두지 않는 동시 심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바이며, 이에 조직적·통일적으로만 대응할 것입니다. 즉 검찰과 재판부의 의도와 진행 형식에 관계 없이 우리들끼리 병합하여 심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본인들의 활동은 남한 민중 운동의 독자성에 기초합니다

이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해야 할 쟁점들에 대해 살펴봅시다.

검찰측은 국가 보안법 제7조 1항, 3항, 5항, 즉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고무·찬양·동조하고, 또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 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하고, 이적 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보관했다는 죄목으로 우리를 기소했습니다.

사회주의는 한국 사회와 한국 민중의 유일하고도 필연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들에 대한 공소장을 따라가며 조목 조목 검찰측을 비판하고, 우리를 변호할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국 사회 현실, 민중 혁명과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필연성에 대해 갈파하고, 우리 삼민 동맹이 그러한 목적에 전적으로 부합하며, 국가 보안법은 과거 이러한 혁명 투쟁의 유효한 제압 수단인 듯 보였으나, 이미 수명을 다하여 스스로의 파멸을 재촉하는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순간, 검찰의 공소장, 더 나아가 지배 계급의 검찰 그 자체가 존재 이유조차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변호 의도와 상관없이, 검찰의 무지와 편견, 게으름에서 비롯됐을, 그러나 대단히 결정적으로 보이는 실수들에 대해서는 몇가지 지적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치 판단 기준하에서도 무지와 편견, 게으름이 미덕으로 보호될 수는 없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검찰은 우리를 적으로 여기고 있고 우리 또한 검찰을 동지로 여겨 충고로써 교정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과제'라는 강령을 통해 우리는 민중 혁명의 필연성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의 현실과 민중 혁명의 필연성에 대해서입니다.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 속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주축으로 하는 계급 대립의 양상과 그 미래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과제'라는 제목의 삼민 동맹 강령을 통해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혔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비호 아래 자본주의적 발전의 온갖 결과물들이 소수 독점 자본가 계급의 수중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 사회는 지배 계급의 천국이 되었으나, 고통의 눈물 속에 성장을 거듭한 노동자 계급은 전제 민중을 이끌고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을 타도하고 민중 권력을 수립하며 민족 통일과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한국 사회 계급 투쟁의 비밀을 통일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선 그대로의 현실이 인식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발전의 구체적 모습(생산 주체들의 생산 수단 소유 양태, 생산의 과정과 내용, 유통과 분배 등), 각 계급들의 존재와 정치적 태도, 대립·갈등의 양상과 그 무기들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류 사회 발전의 보편적 법칙들을 이해함으로써 역사 발전의 다음 시기의 주역이 될 한 계급의 편에 분명히 서서, 그 사상과 과학의 방법들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한쪽 편의 검사들이 이 전제들을 충족시키고 현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다만 본인 등이 지지하는 바와는 다른 한쪽 계급에 완전히 속해 있기는 하나, 이제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그 사상과 현실 조차 올바로 제시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계급', '혁명', '사회주의'란 단어들에 화들짝 놀라 '폭력', '혼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수호' 등 어줍은 단어들을 들먹이다가 우리들의 논리적 공박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의 쟁점인 삼민 동맹이란 조직에 대해서는 검찰의 인식을 깨뚫는 것으로 시작하기로 합시다. 사실 검찰에서는 우리 삼민 동맹이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불순 파괴 세력이라는 악명에 걸맞게 총칼 아니면 가스총이라도 한두 개 보관하고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 비밀 지하 조직이라는 규정에 걸맞게 난수표라도 한두 장 소지하고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공장 전체를 무조건 파괴하는 격렬한 노사 분규 하나 정도를 배후 조종한 증거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문에 그렇게 보도되곤 하던 것이므로 그다지 확대 과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 삼민 동맹을 괴물이라거나 그저 바람 같은 존재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선진 노동자들에게 코웃

고통의 눈물 속에
성장한
노동자 계급은
스스로 힘으로
정권을 타도하고
민중 권력을 수립하여
민족 통일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사실
검찰은 우리가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불순 파괴 세력이라는
악명에 걸맞게
총칼, 아니
가스총이라도 한두개
갖고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혁명의
성격과 풍연성을
노동자 계급과
민중에게
널리 알리고
준비시키고자
합니다.

음을 치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혁명의 성격과 풍연성에 대해 노동자 계급과 민중에게 널리 알리고 준비시키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요구와 조직과 투쟁에 대해 선동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또 신속하게, 계기와 사건을 통해 알리려고 하기 때문에 때론 우리를 감시하는 정보 기관의 눈초리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얹어맬 국가 보안법과 각종 반민주 악법, 국립 깡패 조직과 감옥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지하 폭력 불순 파괴 조직(?)들의 이러한 조건과 활동은 이제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계의 자본가들이 150년 동안 사회주의 조직과 국가에 붙여준 모든 악명들을 한꺼번에 넘겨받고도 의연하게 벼틸 뿐만 아니라 나날이 새로와지고, 그 지지자의 수는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혁명적 노동자당'에 대한 민중적 인식은 우리의 선전과 활동 내용에 대한 인식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자당이란 곧바로 '지배 계급의 피의 학살'과 동의어로 받아들여지는 때문이겠지요. 노동자 계급의 각성과 투쟁에 의해 모든 허위와 기만이 산산히 부서지듯 마지막 남은 두려움 또한 여지없이 깨져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셋째의 쟁점인 국가 보안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땅의 민중들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가진 반국가 단체 북한'과 '민족의 장래를 함께 짚어지고 나갈 민족 공동체의 일원인 북한'을 누구에게, 언제 어느때 구별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북 통일 인사는 전자의 북한을 다녀왔고, 노태우는 7·7 선언, 7·20 선언을 통해 후자의 북한과 교류하자고 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기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시대 작오'라는



꼬리표를 달고도 국가 보안법이 의연히 살아남아 민중 투쟁의 죽쇄로 작용하고 있음은 여전한 모양입니다. 더욱이 냉전과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 지배자들의 지배와 탄압의 주요한 근거이자 수단으로서의 국가 보안법, 또 이념적·물리적·법적·제도적 지배 장치들의 대표자이자 상징물로서의 국가 보안법이란 존재를 고려할 때 그 견고성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존재의 아무런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이렇듯 민족 구성원 전체, 민중 전체의 진정한 해방 염원을 철두 철미 가로막고 있는 국가 보안법과 그 존재 기반을 박살내고자 합니다.

또 '목적범에 대해서만 처벌한다',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가한 경우 처벌한다'는 식의 한정 합헌 판정을 통해 도피하려는 시도나, 가칭 '민주 질서 수호법' 등등의 대체 입법을 통해 악명만을 씻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얄팍한 기도는 우리의 철퇴를 피할 길 없음을 분명히 해 두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검찰측의 무지에 의한 실수는 이미 여타의 사건을 통해 그 마각을 드러낸 바 있으므로 무지를 가장한 도발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검찰측은 공소장에서 본인 등이 89년 6월 10일 삼민 동맹 제2차 중앙 위원회에서 '현시기 우리의 전략적 과제와 조직상 과업의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이라는 제하의 당 건설을 위한 결의안을 확정하는 등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공소장에 인용되지 않은 결의안의 다음 내용들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회주의자와 선진 노동자의 임무인 혁명적 전위 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조선 노동당과의 사상 투쟁, 조직적

이렇듯,
온 민족, 온 민중이
염원하는 해방을
철두 철미 가로막고
있는 국가 보안법과
그 존재 기반을
박살내고자 합니다.



● 분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정치 노선, 전략·전술, 조직 노선, 통일 방안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그것과 명확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도 북한의 조선 노동당과 분립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어찌 반국가 단체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고 이롭게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부니
통장사가
돈을 빈다더니
.....

‘결과적으로 이롭게 했다’는 검사들의 컷속말이 들리는군요. 바람이 부니 통장사가 돈을 빈다더니, 논리적 추론의 제일 단계도 습득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군요.

‘북한 공산 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 통일의 선결 조건으로 반공 정권 퇴진, 반공 정책과 국가 보안법 폐지, 평화 협정 체결 및 주한 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운의 공소장 모두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거기에 적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사물 인식의 기본 태도, 혁명 전략, 조직 노선, 통일 방안 등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공연히 비판해 왔습니다. 우리의 주장, 행동과 북한의 그것이 어떤 공통점, 유사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 선전 효과를 노리면서 우리를 이 법정에 세우려 했다면 최소한 자신의 무지를 어느 정도 은폐하기 위한 노력쯤은 행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듯 이번 재판의 쟁점은 대단히 포괄적이며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립의 당사자간에 전혀 접촉면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부분, 각자가 대변하고자 하는 계급 이해의 차별성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검찰이라는 한 당사자의 무지와 편견, 게으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번 재판에 대한 우리 나름의 의미 규정에 기초하여 우리가 묻고, 또 우리가 대답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 두는 바입니다.

투쟁의 전선 한가운데서 만납시다

이상과 같은 기본 입장에 근거하여 몇 가지 요구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판장님께 우리의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에서의 계급 지배의 관철을 위해 사법부가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소위 정치범에 대한 재판에서 어느 편을 들고 있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의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 관련자 재판 결과와 우리의 동료 운동가들에 대한 판결을 대비시켜 보면 선명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능한한 재판부에 예단을 갖지 않고 이 재판에 임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다만 본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자세 — 더 나아가 민중의 고통과 분노에 귀기울이며, 시대를 사는 양심적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료를 읽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어주십시오. 또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무엇보다 숙고하여 소신 있게 우리를 석방하십시오.

우리를 기소한 검찰, 이 나라 최고 엘리트임을 자처하면서도 한마디 한마디 한글자 한글자에서 무지 몽매함을 드러내고 있는 공안 검찰에 대해서는,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논의는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들에 대한 불법 연행에서부터 재판에 세우기까지 전과정에 대해 즉시 공개 사과하고 공소 취하할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각종 책자와 자료, 컴퓨터 등 우리로부터 불법 부당하게 압수한 물품들을 즉시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민중의
고통과 분노에
귀기울이십시오.
재판장님!
불법 연행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
공개 사과 하십시오.
그리고
소신 있게
우리를
석방하십시오.



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서적에 대해서는 당신들의 하수인인 치안 본부 대공 분실에서조차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을 지경입니다. 압수된 5대의 컴퓨터는 사건 보도를 위한 홀륭한 배경 역할을 했으며 이제 본인들에게 되돌려져야 합니다. 기계에 대해 이상할 정도의 두려움을 갖지 않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컴퓨터는 그저 기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야말로 중요한 증거와 비밀들이 채워져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디스크을 열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족 및 방청객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두 발을 딛고 당당히 설 수 있음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공동 투쟁에 힘입은 바 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후원자이며, 현정권과 국가 보안법을 규탄하는 이 자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으로 여러분의 역할을 끝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투쟁의 소식, 우리의 주장을 노동자에게 가져 가십시오. 이 땅의 양심들에게 가져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투쟁하십시오. 그러면 어느날 투쟁의 전선 한가운데서 우리와 손을 맞잡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민주 노동자 일동

(안양 PD 그룹)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와 노동자 정당 건설을 향하여

I 안양 민주 노동자 일동(김학원 : 항소 이유서 중에서)

II 반제 반파쇼 민중 민주주의 혁명론(김학원 : 항소 이유서 중에서)